

은행 소극적 대출에 중소기업 자금난

‘비 올 때 우산’ 절실... 위기 함께 극복해야
정책기관 · 은행들도 ‘중기와 상생’ 강화 채비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조달의 80%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게 은행 대출은 ‘생명줄’과 다름없다. 사진: 최재규 기자

“은행에 찾아갈 때마다 제가 ‘을(乙)’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낍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등이 없으면 대출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은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섯톱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1) 씨의 하소연이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중동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지만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란다.

대형 조정업체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정모(39) 씨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분위기를 여실히 느낀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업체에서 받아온 어음도 할인을 꺼립니다. 어음 할인이 안 되면 단기자금 대출이라도 해 줘야 하나 그것마저 거부합니다. 오랜 기간 주거래은행으로 지내온 처지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녀두리는 단순히 업살에서 나오는 푸념이 아니다. 지난해 은행 대출 통계를 보면 왜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중기 대출 철저히 외면하는 은행권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2010년 말 321조 원에서 작년 말에는 341조 원으로 20조 원이나 급증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기업대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대기업 대출은 64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14조 원이나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238조 원에서 245조 원으로 7조 원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대기업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상당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해 대기업으로 편입된 데다 중소기업의 부실 채권 상각이 대출 감소로 잡혀 중소기업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듯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외면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금세 드러난다. 통상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시키는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같은 기간에 9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급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3조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들이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면

은행의 기업 대출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64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중소기업은 238조 원에서 245조 원으로 7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자금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중소기업 외면은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하나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경기가 좋을 때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을 줄이는 '비 올 때 우산 뺏는' 식의 금융계 악습이 되살아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돈뭍경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37.3%가 '올해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 '감소할 것'(8.0%)으로 예상한 업체를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 자금 조달 사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곤란을 겪었다'(33.0%)는 답변이 '원활했다'(17.4%)는 응답의 두 배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 외부차입금 중 은행자금의 비율은 2010년보다 17.4% 포인트 증가한 83.3%를 기록한 반면 정책자금 비율은 15.9% 포인트가 줄어든 17.4%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은행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반영했다.

불황 오니 '우산' 뺏어... "대출 늘려 중소기업 살려야"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바뀐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태도에 대해 경제 여건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83%로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말(1.7%)보다도 높다. 건설, 조선, 해운 등에서 부실기업이 속출한 탓이다. 자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경기가 불황일 때 중소기업 대출을 우선 축소하는 관행'(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다. 경기 둔화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지난해 1~9월 상장기업의 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37.3%는 "올해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보일러 제조업체. 사진 신준희 기자

금 흐름은 전년보다 악화돼 업체당 평균 마이너스 17억 원 을 기록했다.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은행권이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중소기업 대출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대출 축소 → 중소기업 경영 악화 → 일자리 감소 → 내수 악화 → 은행 연체율 상승 → 연체율 관리 위한 대출 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타격을 주고 성장동력을 훼손해 나라 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결국 중소기업과 은행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어떻게든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사채 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대기업 대출 잔액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외면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사진: 이지은 기자

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조달의 80% 이상을 은행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은행 대출이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지나치게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해 하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공생하자”… 정책기관·은행 지원 노력 활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하자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의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월 말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대출장터'다. 이 대출장터는 '역경매 대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경매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금액을 제시하지만 역경매 대출은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 측에서 조건을 제시한다. 중소기업이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대출장터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출액과 조건을 제시하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제

시하는 식이다. 기업은 이중 가장 유리한 대출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골라 자금을 대출받는다.

장터가 운영되기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평균 연 6.22%의 대출금리가 적용됐으나 장터를 이용한 후에는 연 5.72%로 0.5% 포인트나 낮아졌다.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들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 지금까지 장터에서 성사된 중소기업 대출은 총 9천633건으로 대출액이 무려 1조1천77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춘 중소기업 지원 전용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혜택 부여, 상환 유예,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의 회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서진원 행장은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표방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 경영 컨설팅 제공, 차입구조 다변화 지원 등 개별 중소기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맞춤형 도움’으로 힘을 실어 줄 방침이다. 이순우 행장은 “우리은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경험이 많은 만큼 자금난을 겪는 중

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중소기업 여신 규모를 계속 늘리고 대출 중단 등의 급격한 조치로 중소기업의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취약한 부문은 속도를 조절하며 점진적 상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고통 분담을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

안승섭 경제부 기자 ssahn@yna.co.kr

신용보증기금이 제시하는 ‘중소기업 신용 관리 10계명’

1. 회계 정보의 투명성 등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노력하라.

은행은 기업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보수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 및 회계 정보의 투명성 강화, 은행과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2.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는 절대 금물, 자동이체도 안심하지 마라.

원금 또는 이자 연체는 정리된 후에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상환일을 철저히 지키고 자동이체통장 잔액을 수시로 파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3. 대표자 개인 신용 관리와 국세 납부기한도 소홀히 하지 마라.

신용 평가 시 기업 대출금 연체 자료만 확인하는 것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과 기업의 국세 체납 정보 등도 여신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사업장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라.

사업장 등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붙어 있으면 신용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압류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불이익이 따르므로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

5. 경영자의 경영 능력 등 비재무적 요소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등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용 관리의 키워드는 경영자 자신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마라.

6. 기업신용정보기관을 활용해 거래처 신용 상태를 수시 점검하라.

매출채권 부실이 신용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다. 신용조사전문기관을 활용해 거래처 신용을 수시로 점검하라.

7.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으로 거래처 신용 위험을 헤지(hedge)하라.

매출채권 부실에 따른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거래처의 신용 위험 완화를 위해 신용보험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8.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대차대조표 위주의 경영 관리를 하라.

단기 외형 성장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 증대에 힘쓰고 타인자본 의존도는 규모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9. 회사의 신용을 적극 홍보하라.

신용평가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정상적인 신용등급 산출이 불가능하다.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0. 전사적인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변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신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위험 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